

지자체 금고 이자율 천차만별…광주·전남 금리 낮고 격차 커

행안부, 금고금리 공개…광주 2.40%·전남 2.29%로 평균 밀돌아 서구 3.35%·남구 2.34%…광주 자치구 내 금리 차 1.01%p 달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금고 금리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 금고는 전국 평균 이자율을 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주와 전남지역 27개 자치단체 금고도 금리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금리' 자료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연간 금리(1금융)는 광주시 2.40%, 전남도 2.29%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금고 평균 금리 2.61%에 못 미쳤고, 전국 지방정부 평균 금리 2.53%도 밀돌았다.

전남도 이자율은 경북(2.15%), 대구(2.26%)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광역단체 금고 이자율은 인천(4.57%), 서울(3.45%), 세종(2.68%) 순으로 높았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평균 장기예금(12개월 이상) 이자율은 2.52%로, 광주·전남 27개 자치단체 가운데 광주시·서구(3.35%)·광산구(2.86%)·동구(2.61%)를 뺀 나머지 24개 자치체는 전국 평균 이자율을 밀었다.

광주 5개 구 가운데 이자율이 가장 낮은 곳은 남구(2.34%)였고, 북구(2.43%)가 뒤를 이었다.

남구와 서구의 금리 차이는 1.01%p인트에 달했다.

전남 22개 시·군 모두는 전국 기초단체 평균 이자율에 못 미쳤다.

전남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순천

(2.41%), 가장 낮은 곳은 강진군(2.04%)으로 0.37%p인트 차이가 났다.

순전에 이어 여수(2.40%), 목포·광양(각 2.35%), 무안·해남(2.25%), 나주·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영암·합평·영광·장성·완도·진도(2.20%), 신안(2.18%), 강진(2.04%) 등 순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 간 금고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시 고정·변동형 여부 등 금고 금리 약정 형태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 금고 금리를 공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전수조사·공개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의 금리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모든 지방정부는 누리집 등을 통해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바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통합공개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유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협체 광주시와 광주 4개 자치구·목포시의 1금융은 광주은행이, 전남도와 광주 광산구·전남 21개 시군의 1금융은 NH농협은행이 맡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남구 '광주·전남 통합 시민공청회'

광주 남구민들을 위한 '광주·전남 통합 시민공청회'가 28일 오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교육감,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참석자들이 통합 추진의 의지를 담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의회, 의석 확대안…통합 특별법 반영 어려울 듯

전남·정치권 난색…특별법 아닌 정개특위 몫으로 밀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한 축인 광주시의회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지역구 의원 정수 확대' 방안이 시·도 간 이견과 정치권의 난색으로 인해 이번 주발의될 통합 특별법에 담기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28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그동안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 지역구 의원 수를 현행 20명에서 40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인구 대비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면, 광주시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는 약 6만1000명인 반면, 전남도의원 1명당 대표 인구는 2만9000명 수준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시점까지 파트너인 전남도의회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해당 조항의 법안

반영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절차와 시기 문제다.

정치권 내에서는 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통합 특별법'이 아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소관 사항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6월까지 남아있는 만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 때 다뤄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여기에 전남도의회의 입장 차도 발목을 잡았다. 전남도의회는 촉박한 특별법 발의 일정을 감안할 때, 민감한 의석수 문제를 건드리기 보다는 현행 정수를 유지한 채 법안을 우선 발의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제7차 회의를 열고 긴급 대응책을

논의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제외한 통합의회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독립, 법적 지원 강화, 정무부시장·감사위원장 인사청문권 도입, 주민투표 요건 완화 등 나머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파악했다.

시의회는 의원 정수 확대안이 이번 발의안에서 제외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구 대비 표의 등가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광주 20명, 전남 55명' 구조인 현행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는 29일 오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특별법 발의 직전 시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수정안을 공식 요구할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선인 기자 sunin@

광주시, 육아 품앗이 지원…최대 100만원

내일부터 참여 모임 모집

광주시가 저녁이나 주말 등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믿을 수 있는 이웃들이 서로 아이를 봄아 주는 '주민 주도형 육아 공동체' 확산에 나선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밥'에 참여할 40여 개 자조 모임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기존의 공적 돌봄 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웃 간의 연대를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4년 처음 도입됐다.

참여 자격은 광주에 거주하면서 영유아나 초등 학생 자녀를 키우는 3가구에서 5가구로 구성된 모임이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모임에는 참여 아동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1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이들은 오는 4월부터 이웃 간 협의를 통해 평일 저녁이나 주말, 혹은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아

이들을 서로 돌봐주는 활동을 하게 된다.

신청은 광주여성가족재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이나 재단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시행 첫해인 지난해 43개 모임, 156 가구가 참여해 총 1014회의 돌봄 활동을 기록할 정도로 현장의 반응이 뜨거웠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단순한 이웃돌봄을 넘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쌓는 '사회적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진아 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사업이 홀로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부모들이 짐을 덜고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민자치 보장제도 마련해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공동 토론회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시·도민이 주인 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거대해진 통합 지방정부의 권력 독주를 막기 위해 의회의 기능을 연방제 수준으로 격상하고,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통합, 시민주권과 민주주의를 끌어온 시간' 토론회에서는 통합 특별법 초안에 대한 비판

과 보완 대책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현제의 특별법은 지지분권의 외형은 갖췄으나 시민 주권의 핵심인 자치 내용은 부족하다"며 "강행정·의회 조치를 깨고 주민 소환 요건을 5%로 낮추는 등 직접 통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기 전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은 교육 부문의 정교한 설계를 주문했다.

박 전 총장은 "제왕적 교육감의 탄생을 견제하기 위해 독립적 의결 기구인 '광주전남특별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교원들이 걱정하는 강

제 전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전 임용 공무원의 근무지 유지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김현진 광주시의회 입법조사관은 의회의 위상 강화를 역설했다.

김 조사관은 "서울시 사례를 들어 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단체장의 특례 권한이 발효되도록 하는 입법적 안전장치를 제안했다.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은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보 공개 원문 공개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고, 박삼원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유·초·중등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명실 상부한 교육자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위하여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믿음이 있는 대학,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 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면지로 36

202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 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성경연구학과(Th.D.)	○
		사회복지학과(D.S.W.)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심리디지털융합학과(D.Psy.)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가족상담청소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실용음악학과(M.A.)	○
		한국어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신학대학원 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신학과(M.Div.)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 교육부장관이 인정